

미래전략연구원 이슈와 대안

국회, 소통의 노력부터 시작하라

임지봉 (거버넌스전략센터 연구위원 / 서강대 법학부 교수)

두 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린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석에서 오물을 살포한다. 한 국회의원이 발언 중인 국회의원을 발언대에서 폭력으로 밀어낸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 명의 국회의원이 발언대에서 폭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에게 다시 폭력을 가한다. 한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장 명패를 다른 국회의원에게 던져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힌다. 여당의원들이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본회의장 출입문에 책상과 소파로 바리케이트를 쳐서 야당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한다. 특검법의 직권상정 방안이 추진되자 야당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한 채 원천봉쇄에 나선다. 여당의원들이 출입구를 봉쇄한 쇠줄을 절단하고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후 여야의원들 간에 난투극이 벌어진다. 그 후 의장 직권상정으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야당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처리가 이루어진다. 이상은 지난 역대 국회에서 소위 ‘국회내 폭력’이 행사된 예들 중의 일부다.

이런 악습은 이번 18대 국회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지난 2008년 12월 18일 오후 2시에 국회 외통위원회 회의장 문 앞에서는 해머, 전기톱, 소화기 분말, 소방호스의 물줄기가 동원된 폭력이 연출되었고 이 장면이 외국 언론에까지 송출돼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었다. 이는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 징후를 포착한 외통위 여당의원들이 한미 FTA 비준안의 원활한 상정을 위해 외통위 회의실 문을 걸어 잠가 야당 국회의원들의 회의실 진입을 처음부터 차단하고 나섰고, 이에 분개한 야당의원들이 회의실문을 열기 위해 각종 기구를 동원하고 안에서 다시 여당의원들이 이에 응수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의 국회의원 보좌진들과 국회 경위들이 부상했다는 전언이다. 언제부턴가 국회의 이런 폭력현장에 국회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동원되는 것이 다반사가 되었다. 이번의 해머나 전기톱 말고도 전기 충격기나 가스총 등 위험물건의 국회내 반입이 증가하고 있기도 하다. 작은 폭력사태가 언제든 대형사고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러한 국회 폭력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화와 타협을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서둘러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법안 처리와 이에 대한 실력저지로 나서는 우리 국회의 후진적 정치행태가 그 근본원인일 것이다.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국회 다수당은 소수당 소속의원들

이나 국민들을 상대로 법안의 취지나 내용, 효과에 대해 설득하려는 노력은 별로 기울이지 않으면서 다수당 소속의원들만의 단독표결 처리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들을 신속히 통과시키려 하는 반면에, 소수당은 국회의장석이나 본회의장 및 각종 국회시설물들의 점거와 같은 실력저지를 통해서라도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막으려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회 폭력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고질적인 하향식 정당공천과도 연결돼 있다. 당원들이 상향식 공천권을 행사하는 서구 선진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공천권은 당에서 장악하고 있다. 다음 선거에서의 공천이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국회의원들로서는 공천권을 거머쥔 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 보다는 당 수뇌부의 의중을 살피기 바쁘고 이 때문에 국회 폭력현장에서 돌격대를 자임하고 나서는 충성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단언컨대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정당화되거나 미화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폭력을 더 많이 사용한 야당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회의 이번 폭력사태를 목도한 국민들의 여론도 아주 나쁘다. 경제위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국민들에게, 싸우는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국민들의 차가운 눈초리를 의식해 여야가 각자 해결방안이라는 것들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해결방안이라는 것도 결국 상대방에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내용들이다. 여당은 법안에 대한 대야 설득 및 대국민 홍보 부족에 대한 반성이나 개선안 마련에는 뒷짐을 지고 오직 국회 폭력에 중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한 폭력의원처벌법 마련에만 몰두하고 있다. 야당 또한 각종 회의장 점거나 폭력 행사에 대해 제대로 된 반성의 모습을 보이거나 공식적으로 사과한 적이 없다. 이런 식의 방안이나 태도는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특히 여당이 법안까지 마련해 놓은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적지 않은 법적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우리 형법 제138조는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이라는 제목 하에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법정과 함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규정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이런 형법 규정에 대해 특별법의 형식으로 제정하려는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국회 내 폭력행위를 한 사람에게 오직 징역형만 선고될 수 있게 하고 있다. 즉, 법상 징역형이 선고되면 당연히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국회폭력방지특별법 규정의 구성요건에 해당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려는 것이다. 국민의 선거로 뽑힌 국회의원들의 의원직을 임기 만료 전에 박탈하는 법적 장치로는 동료 국회의원들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제명 결정이 유일하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국민대표는 오직 대부분의 동료의원들 손에 의해서만 그 자격이 박탈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 자율권 존중 사상이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 그런데, 징역형이 유일한 법정형인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국회의원직의 박탈권한이 사실상 사건 수사 후 이를 기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검사나 재판을 통해 유·무죄의 결정을 내리는

사법부 판사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 국회의원 신분 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국회 자율권을 사법을 담당하는 판·검사들에게 넘기는 꼴이다.

따라서 국회폭력방지법 같은 특별법 제정보다는 국회의 자정능력 제고와 대화 및 타협을 끈질기게 시도하는 정치문화의 선진화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믿는다. 법을 만들어 무겁게 처벌하면 정치문화가 바뀔 수 있다는 법만능주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 오히려 기존의 국회 법안 심의절차 등에 관한 국회법 규정들을 손봐서 법안심의과정에서 여야 간에 폭력을 수반한 극한대립보다는 대화와 타협이 시간을 두고 끈질기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즉, 제도를 손보더라도 예를 들어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에 앞서 법안 심사기간을 72시간이상 되게 해서 대화와 타협을 위한 실질적인 시간적 여유를 갖게 한다든가, 국회의원의 본회의 발언시간을 현행 15분에서 훨씬 더 많이 늘려서 소수파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형사판례에서도 싸움을 하면 누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건 싸움을 한 양측이 둘 다 가해자가 된다. 민사상으로 폭행의 시점 및 정도나 싸움으로 인한 부상의 정도가 민사상의 책임을 산정하는데 영향을 줄 뿐이다. 국회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지고 국제적 망신을 당하는 것에 대한 책임은 여야 모두에게 있다. 누가 여야 간 싸움에 원인 제공을 했고 누가 어떤 폭력을 얼마나 휘둘렀는가를 두고 논란을 벌이기보다 신성한 국회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여야 모두가 가해자로서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폭력을 행사한 의원들의 의원직 유지 여부를 검찰이나 법원에게 떠넘기는 법 제정은 문제해결에 별 도움을 줄 수 없다. 국회 내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은 얼마든지 뒤바뀔 수 있다. 대화와 타협의 선진 정치문화가 정착되지 않는 한 오늘의 다수당이 내일의 소수당이 되었을 때, 지금의 소수당과 똑같이 국회의 장석과 국회 회의장들을 실력으로 점거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여야가 모여서, 앞으로는 끝까지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법안 심의와 관련해 여야 간에 또 국민을 향해, 끈질기게 소통하고 합리적 타협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부터 하는 것이 급선무라 믿는다. 대화와 타협 없이 수로 밀어붙이거나, 수적으로 밀린다고 물리력부터 쓰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국민들이 금배지를 달아 준 진정한 이유는 인내심을 갖고 아무나 할 수 없는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끈질기게 기울이는 선량이 되어달라는 데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

내용 문의 :

미래전략연구원 <http://www.kifs.org>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50-2 삼영빌딩 8층 우)100-813 / 전화 (02)779-0711 / 팩스 (02)779-0718 / 메일 kifs@kifs.org